



/ 특 / 집 /

우리 쌀 '자포니카' 어떻게 지켜야 하나?

# 국가안보적 차원의 중요성 지녀 '최소시장 개방' 만 허용해야

관세를 부과, 국가간 형평성 잃지 않는 합의 도출 기대  
'쌀' 반드시 자급해야, 밀·옥수수와의 실정 크게 달라

**세**계의 쌀 총 생산량의 85% 정도는 열대성 기후에서 생산되는 인디카 쌀이고 온대성 기후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쌀은 15% 내외이다. 자포니카 쌀은 그 대부분이 일본, 한반도, 중국의 북부 등 동북아시아에서 생산되며 그 소비도 이 지역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밖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북부지방과 호주의 동남부 지방의 관개농업 지역이다. 이들 두 지역의 벼 재배면적은 30만ha 정도로 이것은 남한 벼 면적의 1/3에 미달한다. 이들 두 지역은 문순기후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공급부족으로 벼 재배면적은 약 30만ha에서 크게 늘어난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쌀과 호주 쌀의 수출물량은 두

지역을 합하여 1998년에는 102만톤, 2000년에는 110만톤이며 2010년에는 120만톤 정도 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간 120만톤의 쌀 수출량은 일본과 한국이 연간 소비하는 약 1,450만톤(일본의 900만톤과 한국의 550만톤)의 1/10에 미달하는 양이다.

그리고 자포니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쌀만큼은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포니카 쌀의 국제시장은 발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1960년~1995년 기간에 국제시장에서 연간 거래된 자포니카 쌀의 양이 평균 약 100만톤에 지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과 한반도에서 이상기후로(주로 냉해) 흉작이 되면 자포니카 쌀의 수입수요가 돌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

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포니카 쌀의 국제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이것은 곧 우리 거래의 주체인 자포니카 쌀만은 밀이나 옥수수처럼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서 우리는 쌀만은 우리가 자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 통일·안정적 식량공급 위해 벼농사 위축 안될말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국내 쌀값은 국제시장의 쌀값에 비하여 일본은 10배 이상, 한국은 5배정도 높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이 중요하다. 그 하나는 일본과 한국은 땅값과 노임이 높아 쌀의 생산비가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쌀값을 높이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산물 수입자유화를 위한 UR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호주는 일본과 한국의 쌀 시장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 12월 15일에 일본과 한국은 해마다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UR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MMA(최소시장 접근) 쌀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1995년부터 기준년도 쌀 소비량(900만톤)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시작, 2000년에는 그 비율을 10%까지 높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 이후에 관하여는 다시 협상하기로 하였다. 일본이 수입해야 하는 MMA 쌀은 1995년에는 36만톤이었고, 그것이 해마다 늘어나 2000년에 가서는 90만톤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다.

반면 한국 농업은 개발도상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1995년에는 기준년도 쌀 소비량(550만톤)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 가서는 그 비율을 4%까지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관하여는 그때 가서 다시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의 의무적인 수입량은 1995년에는 5만톤에서 시작하여 2004년에 가서는 22만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은 캘리포니아 쌀과 호주 쌀의 수출 가능물량과 거의 같다. 이것은 미국과 호주가 그들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쌀을 일본과 한국이 수입하게끔 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MMA 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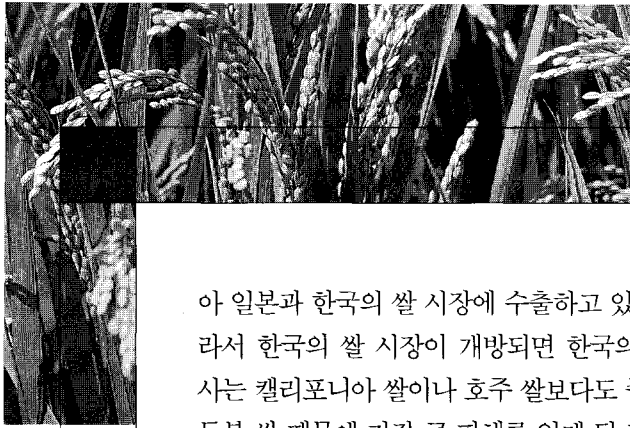
왜냐 하면 1990년대 초기만 하여도 미국과 호주의 쌀 수출업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쌀 시장이 개방되면 캘리포니아 쌀과 호주 쌀이 한국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은 중국 동북지방의 자포니카 쌀의 국제경쟁력을 무시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1995년 이후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쌀의 가격경쟁력이 캘리포니아 쌀이나 호주 쌀보다도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黑龍江省 三江平原에 있는 54개 국영농장들의 벼 면적이 1995년의 18만ha로부터 2000년에는 70만ha로 약 4배 늘어났으며 ha당 쌀 수량도 5톤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2000년 동안 黑龍江省의 정부미 수매가격은 톤당 202달러로 나타났다. 이 가격은 국제시장의 자포니카 쌀 가격에 비하면 1/2의 낮은 값이다. 게다가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 쌀의 양이 많음은 물론 중국에서도 1인당 쌀의 소비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쌀이 남아돌



박진환  
북방농업연구소



아 일본과 한국의 쌀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쌀 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벼농사는 캘리포니아 쌀이나 호주 쌀보다도 중국의 동북 쌀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벼농사가 중국의 값싼 쌀 때문에 감축되어도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고, 우리 겨레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 2004년 이후 쌀시장 향방, 국가적 과제 대두

일본은 1999년 이후부터 해마다 70만톤의 MMA 쌀은 계속 수입하되, 그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수입되는 것은 1,0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1999년~2002년 기간에 1,000%의 고율 관세를 지불하고서 일본시장으로 수입된 외국 쌀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일본이 1,000%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근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1994년 말에 있었던 UR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2000년 이후에도 MMA 쌀의 수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때는 기준년도(1987년)의 일본 국내 쌀 가격과 그 해의 수입 쌀의 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1987년 일본의 국내 쌀값과 국제시장 쌀값과의 가격차는 약 10대 1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본은 1999년부터 1,0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1999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68만톤의 MMA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으며, 그 이외에 수입되는 쌀에 대하여는 약 1,0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수입된 MMA 쌀의 물량이 적었고, 그것이 국내 쌀값을 하락시키거나 쌀의 재고량을 늘리는데 지배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도 한국은 MMA 쌀의 수입량이 해마다 늘어나더라도 그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2004년 이후부터는 한국도 일본처럼 기준년도의 MMA 쌀 수입은 계속하되, 그 이상의 쌀이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필자는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 하나는 한국에 어느 정도의 고율 관세가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쌀이 지니는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7년도에 국내 쌀값과 수입 쌀과의 가격차가 10대 1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일본은 1,000%의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므로써 일본의 벼농사가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1987년도의 한국의 국내 쌀값



과 한국이 수입한 쌀과의 가격차는 4대 1 정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고율 관세율은 400%만 허용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987년 당시만 해도 일본의 경제력은 국내 쌀값을 국제가격의 10배 이상으로 높이더라도 그것이 일본의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는 낮았기 때문에 국내 쌀값이 국제시세의 4배 이상이나 높아지면 소비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었던 시대였다.

그런데 쌀 시장의 개방에 있어서 일본은 1,000%의 고율 관세율이 인정되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400%의 고율 관세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벼농사는 높은 관세율로 보호되게 해주고, 개발도상국의 벼농사는 낮은 관세율에 의해 벼농사가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 한반도 특수사정 감안, 합리적 합의 이뤄야

한국이 만약에 2004년 이후부터 400%의 관세율만 허용한다면, 한국의 쌀값보다 1/5~1/7의 낮

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동북 쌀이 얼마든지 한국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알면서도 기준 년도인 1987년에 합의된 것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쌀 시장을 개방한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1994년말 쌀 시장 개방에 관한 UR 협상이 이루어진 당시의 미국은 일본의 쌀 시장을 개방되게 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지,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본이 1,000%의 관세율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그것보다 높은 관세율이 인정되어야 사리에 맞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쌀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 지구상에서 한반도에서만 분단된 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북한에서는 쌀이 모자라 많은 아사(餓死)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남한의 벼농사는 그야말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출국의 하나로 발전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들은 모두 수입 자유화되고 있다.

통일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벼농사가 지켜질 수 있게 최소의 시장 개방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한반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의 쌀 시장 개방만은 기준년도 쌀 소비량(550만 톤)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동안 해온 것과 같이 MMA 쌀의 수입을 지속하되, 주로 캘리포니아 쌀과 호주 쌀을 수입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들의 쌀 수출이 늘어나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약정보**

